탄핵심판 마무리 작업 착수…내달 10·13일 선고 유력

헌재, 증인신문 완료 증언 정리
국회·박대통령측 최종서면 요구
내달 13일전 '8인 체제' 선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한 헌법재판소가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3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헌법연구관들은 전날 예정된 모든 증인신문이 완료됨에 따라 유의미한 증언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조계에선 증인신문 종결과 함께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 초고 작성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론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정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주요 법리 등을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23일까지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그간의 의견을 총정리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통령측은 일단 불용했다.

대통령 측까지 이날 최종 서면을 제출했을 경우 재판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변론 기일 진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지난 22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달 24일로 잡혔던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날짜로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꽉 채운 일정이다. 특히 헌재 내부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도 오전 선고·오후 퇴임식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권한대행이 빠지며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7인 체제' 하의 선고는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선고와 연동되는 제19대 대선일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대선일로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국민의 명령…특검 연장하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이은권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특검연장 연좌 농성장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공소유지 위해 검사 10명 잔류 필요" 인력·예산 지원 국회 입법 요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인력이 최소 10명가량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공소유지"라며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로 현재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의 잔류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가 대부분 복귀했던 점을 고려해 잔류 여부를 두고 (검찰과) 상호 간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돼 있고,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원은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는 달리 기소됐거나 기소할 피고인 수가 많다"며 "그러나 공소유지와 관련한 규정은 기존 특검법과 큰 차이가 없고, 더 불리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조정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다 보니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특검 측의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현행 특검법 해석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인력을 배치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특검이 끝까지 공소유지를 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연대든 공동정부든…중진들 '호남몫 찾기' 나서라

조기 대선 이슈&분석
호남 주도 정권창출 가능할까

주요 대선주자 없어 자력 집권 난망
경험 활용 호남정치 살리기 나서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 가능성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광주·전남 등 호남 출신 유력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데다 현재의 대선 판세를 감안한다면 호남 정치권이 주축인 국민의당 자력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여서다.

일각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연립 및 공동 정부 구성에서 호남의 몫을 찾는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론을 내세워 정치적 생명을 이어간 호남 중진들에 대한 눈길이 곱지 않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과 호남의 미래를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진들은 정권 창출을 위한 헌신의 모습보다는 당 지도부에서의 주요 보직과 국회 요직에 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중진들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선다는 설과 함께 대선 정국에서 공동 정부가 현실화된다면 입각에도 눈길을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호남 민심의 향배가 야권의 정권 창출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중진들이 앞서 리드하기 보다는 뒤도 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다는 점에서 호남 중진들이 절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선 이후, 정국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다는 것이다.

중진들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호남과 호남 정치권의 미래를 위해 나서는 결기 있는 모습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책임론 등의 역풍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남 중진들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당을 주축으로 하는 호남 집권 플랜 제시하며 구체적 행동에 나서는 한편, 공동 정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 등을 통해 호남의 몫을 찾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호남 중진들은 억울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과 당내 주자들의 지지율이 뜨지 않는 상황에서 호남 중진들이 나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지 않느냐"는 것이다. 시기가 된다면 호남 중진들이 전면에 나서자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이뤄지고 대선 국면이 분명해지면 호남 중진들이 주어진 역할을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의 유력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야권이 정권 창출을 하더라도 공동 정부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호남의 몫이 반영되는데 호남 중진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